

##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임 민간위원들과 간담회 개최

- 12명의 신임 민간위원 위촉, 국가 인구전략 마련을 위한 본격 활동 개시
- 저고위 부위원장, 신임 저고위 민간위원들과 첫 상견례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 6일(수) 김진오 부위원장 주재로 올해 4월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들과 첫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 신규 민간위원은 다양한 연령·지역·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저출생·고령화 뿐만 아니라 인구문제 관련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 특히, 신규 위원으로는 수십 년간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연구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온 김정석 위원(前 한국인구학회 회장), 교육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초롱 위원(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20대 청년 대표 이수명 위원(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등을 새롭게 포함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 이들은 임기 2년간 인구전략 기본계획 논의에 참여하여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 금번 간담회에서 저고위 위원들은 우리 사회가 인구구조 전반의 변화에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 특히, 인구정책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높은 정책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김진오 부위원장은 “이제는 저출산·고령화를 떼어 보는 상황을 넘어서, 일·가정 양립, 교육, 돌봄, 주거, 지역, 이민 등 전반을 함께 바라보는 ‘인구전략’의 관점으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민간위원들에게 “앞으로 최초의 인구전략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현장과 전문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힘써달라”고 요청하였다.
  - 또한, “새로운 인구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앞장서달라”고도 언급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인구정책의 법적 근거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작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전환기에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인구정책의 거버넌스 전반을 재편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임 민간위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구전략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태정 (02-2100-1211)
		담당자	서 기 관	노정림 (02-2100-1217)

연번	성명	소속
1	김정석	○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2	민주홍	○ 강원대 행정학과 부교수
3	서상형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4	선초롱	○ 잠신고등학교 교사
5	안성숙	○ 아이파랑새어린이집원장
6	윤진호	○ 서울도시포럼 대표
7	이소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이수명	○ 사회적협동조합 다같이 사무국장
9	이총희	○ 백운회계법인 이사
10	최세문	○ (주)우분투건강정책랩 대표
11	최영준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12	한정열	○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